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3개 철거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 보 처리방안 발표

세종보·공주보·죽산보 해체 편익 커... 수질 크게 개선 백제보·승촌보 편익 낮지만 장기적 물흐름 위해 상시개방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伏) 중 3개를 철거(해체)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3개 보 해체를 위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2013년 초 보 건설이 완료된 이후 6년 만이며, 4대강 16개 보 중에서 처음으로 해체되는 것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

이 해체할 때의 총 편익보다 낮아 해체하지 않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보 별로는 세종보의 경우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 농업용 양수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과 같은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보 구조물 해체에 드는 공사비보다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보도 해체할 때 수질·생태가 크게 나아지고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공사비와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하기 때문

에 해체하는 게 낫다고 결론냈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안정성과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보 기능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했다.

죽산보는 보 설치 전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질·생태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를 없앨 때 쓰이는 비용보다 높다고 봤다. 하지만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과 하구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질 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백제보의 경우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 설치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현재 수막재배 등 물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양

수장·지하수 활용 대책을 추진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승촌보 역시 없앨 경우 영산강의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를 운영하면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한 후 수질·생태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상시 개방하도록 했다.

기획위는 이번 보 처리방안을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보별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자체·주민·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환경부도 오는 26일부터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 시기·기간·공법과 물 이용 대책 등의 후속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별 및 수계별 협의체를 잇달아 연다.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국제심포지엄도 가질 예정이다.

기획위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보 처리방안은 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연내 제시한다. /뉴스

여야 4당, 5·18 왜곡 처벌법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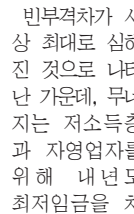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특별법에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현정질서 파괴범죄

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는 내용의 정의가 추가됐다.

또 제8조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항목을 신설해 5·18 관련 부인이나 비방, 왜곡·납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

평화당 유성엽 의원 "최저임금 차등 지급해야"



민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너져 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작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경

제 참사라 꼬집으며,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년 전 대비 무려 17.7%나 감소,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10.4% 증가하여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분기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으로, 근로소득이 36.8%나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김진성 기자

한-인도 정상회담

“인도 신동방-한국 신남방 정책 서로 시너지 효과”

모디 인도 총리 “특별전략 동반 관계 강화 플랫폼 역할 문 대통령 덕분에 한반도 평화·안정... 항구적 평화 최선”

우리나라를 국민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2일 “인도의 ‘신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 남방정책’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플랫폼으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인도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포용적 비전을 갖고 있다. 또 아시아 중심의 번영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 있어서 인도와 한국이 공통의 가치관과 이해에 기반해 전체 세계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의 ‘신 동방정책’은 경제·외교 영토적으로 고립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벵골만·아세안·동북아·미국 등 동쪽으로 외연을 점차 확대하려는 대외정책이다. 외교다변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과 접점이 많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한 후, 우리는 큰 관계 진전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었다”며 “이 같이 우리의 미래관계 진전을 위한 로드맵은 우리의 사람·평화·번영이라는 공통비전에 기반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을 인도의 경제 대전환에 있어서 소중한 파트너로써 생각하고 있다. 두 나라 간의 무역 및 투자관계는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두 나라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이날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항만개발·해양·식품가공·창업·중소기업 분야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모디 총리는 소개했다.

모디 총리는 또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방위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예가 한국산 무기 K-9 자주포를 인도 육군 무기에 접목한 것”이라며 “이러한 방위산업에 현저한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한국과 인도는 국방기술 및 공동생산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확고한 확신과 인내에 경의를 표하고, 그 덕분에 얻은 결과를 축하한다. 앞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방문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인도 “원전건설 한국 참여” 문 대통령 “많은 기회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인도의 원전 추가 건설 계획과 관련해 “한국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며 적극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에 배석한 비제이 케사브 고게일 인도 수석 차관의 제안에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고게일 수석 차관은 “한국과 인도는 2011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상대.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기반이 구축돼 있다”며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찬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달라”며 “인도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다”며 “인도가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국의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허왕후 기념우표 공동발행 등 한-인도 정부, MOU 4건 체결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한·인도 정상회담 뒤 허왕후 기념 우표 공동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두 나라 정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함께했다.

한·인도 정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 이 임석한 가운데 MOU 서명식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 정부는 ‘허왕후 기념 우표 공동발행 MOU’를 체결했다. 허왕후는 두 나라 간 오랜 교류를 상징하는 설화로 고대 가야국 수로왕과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왕후의 이야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 정부와 ‘코리아 플러스 MOU’에 서명하고 인도 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 내 한국기업 지원 전담팀인 ‘코리아 플러스’ 운영 기간을 2022년 1월까지 연장하는 경신안에 합의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 MOU’에 서명했다. 해당 MOU는 인도 구르가온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과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협력 MOU’에 서명, 두 나라 경찰간 국제범죄 관련 공조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뉴스



진안의 청정고원에서 자란
건강함 가득한 우리 농산물

진안로컬푸드 OPEN

정성으로 일궈낸 진안의 맛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F] 진안로컬푸드
명인·명품 진안홍삼관
홍삼 죽육 체험관
홍삼카페

[2F] 두루미밥상
자연정식, 산채비빔밥
장터국밥, 버섯갈비코다리찜

2월 28일(금), 오픈특별행사
진안농산물로 만들어진
시식코너 및 할인행사

* 방문객 누구나 제공해드립니다. * 식자재 소진 시까지 행사 진행합니다.

진안로컬푸드

← 송천동 삼성장례문화원

전주 사랑의집

전주차량등록사업소

진흥W파크 3단지아파트

전주W빌딩